WELFARE ISSUE TODAY

복지이슈 TODAY

VOL.153(2025년 12월)

2025년도 연구

국내이슈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들이 돌보는 가족을 같이 지원해야 • **이수영** 04

영국의 사회적 처방 제도 • **현명이, 임완섭, 윤정미** 05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김현승** 06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의미 • **안기덕** 07

해외 전문가 기고

Citizen Social Science(CSS) at Coventry, United Kingdom(영국 코번트리의 시민사회과학)

• **Sinead Ouillon(시니드 우이용), Andree Woodcock(엔드리 우드콕)** 08

해외동향

[영국] 영국 성중립 화장실 정책변화와 현황 • **윤새별** 12

[영국] 영국의 복지서비스 전환 모델 Universal Support • **정우택** 13

[프랑스] 프랑스정부의 청년돌봄자 지원정책 • **이은주** 14

[호주] 2025년 연방 선거를 통해 드러난 호주 복지의 민낯과 성찰 • **박홍재** 15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ELFARE ISSUE TODAY

복지이슈 TODAY

발행인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기획위원회
김원호(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궁은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유석(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아카이브 → 복지이슈 투데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센터 02-6353-0413, today@welfare.seoul.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5년도 연구

국내이슈

01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들이 돌보는 가족을 같이 지원해야** •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 04

02 **영국의 사회적 처방 제도** • 현명이(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정미(서울시복지재단 위촉연구원) 05

03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김현승(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장) 06

04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의미** • 안기덕(서울시복지재단 연구2팀 연구위원) 07

해외 전문가 기고

Citizen Social Science(CSS) at Coventry, United Kingdom(영국 코번트리의 시민사회과학)
• Sinead Ouillon(시니드 우이용), Centre for Trust, Peace and Social Relations,
Andree Woodcock(엔드리 우드콕), Centre of Arts, Memory and Communities 08

해외동향

[영국] **영국 성중립 화장실 정책변화와 현황** • 윤새별(영국 에딘버러 대학 사회·정치학 박사과정) 12

[영국] **영국의 복지서비스 전환 모델 Universal Support** • 정우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주임) 13

[프랑스] **프랑스정부의 청년돌봄자 지원정책** •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14

[호주] **2025년 연방 선거를 통해 드러난 호주 복지의 민낯과 성찰** •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15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들이 돌보는 가족을 같이 지원해야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6.)」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구성요건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도움 제공'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돕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자격기준이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 대상별 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제도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치매등급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혜자격과 제공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최근 설계된 욕구 기반 돌봄서비스인 '일상돌봄서비스'와 서울시의 대표적 돌봄서비스인 '돌봄 SOS'는 돌봄서비스 필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료가 달라지는데, 일상돌봄서비스는 수급자와 차상위는 기본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나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시 기본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고, 돌봄 SOS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려는 제도 내 유급 돌봄제공자인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에 국한되고 있다. 즉, 사적 돌봄제공자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제도의 설계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서비스 제도 설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족돌봄청년은 청년의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결핍이 당사자의 미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도 중 가족돌봄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돌봄청년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에 대한 대체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이 아니라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서비스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므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기존 돌봄서비스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롯이 사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피돌봄가족 167명에 대한 조사 결과[1]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62.3%로 37.7%는 등록장애인이 아니었고, 치매등급을 가지고 있는 피돌봄가족은 15.0%에 불과하였다. 수급자는 49.6%로 가족돌봄청년의 상당수는 본인 부담 없는 공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대체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는 반쪽짜리 지원에 머물고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 모두를 지원하는 온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이 현재의 삶을 누리고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족돌봄청년이 자격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해 한시적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체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과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욕구 및 위기도를 사정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된 툴을 적용해 사정하고 사정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가구단위 사례관리를 본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를 통해 2023년부터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족돌봄청년의 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정하고 있다.

본인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에게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돌봐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은 공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적 체계는 새롭게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기존체계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❶ 이수영·박진원(202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영국의 사회적 처방 제도

현명이(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정미(서울시복지재단 위촉연구원)

최근 사회적 처방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처방은 의료적 접근 외에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일상생활에서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비의료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의료계에서 지칭하는 처방, 즉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 관계 등을 연계·확대하는 방식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처방은 건강불평등과 일차 의료체계의 부담 및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비의학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차 의료체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체계이다.

사회적 처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링크워커라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NHS England에 따르면 링크워커란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는 활동과 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NHS England, n.d.).

링크워커의 핵심적인 역할은 주로 일차진료 연결망 내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의뢰된 개인과 가족, 돌봄제공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요구를 평가 및 확인하여 맞춤형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이들을 지역자원에 연계하고 추적·관리하는 것이다.

링크워커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 지원체계 등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처방의 유형은 5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문화예술 사회적 처방(Arts and Culture Social Prescribing), 헤리티지 사회적 처방(Heritage Social Prescribing), 녹색 사회적 처방(Green Social Prescribing), 신체활동 사회적 처방(Physical Activity and Social Prescribing) 등이다.

사회적 처방의 유형인 정보제공은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정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자선 단체 연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1]

문화예술 유형의 사회적 처방은 합창단이나 노래모임 활동, 공예나 그림 그리기 등의 미술 수업, 갤러리 방문, 치매 등 특정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음악 세션 활동 등이다.

헤리티지 사회적 처방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환경에 참여하는 것인데 문화유산 투어, 고고학 발굴, 웰빙 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단체들과 연결하거나 이를 지원한다.

녹색 사회적 처방은 사람들이 자연 기반 활동에 참여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 정원 가꾸기, 지역 산책 계획, 환경보호 자원봉사, 야외 예술 및 문화, 야외 수영, 친환경 체육관 등이 포함된다.

신체활동 사회적 처방은 필라테스 수업, 걷기, 축구, 냉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과 더불어 자연 속 산책, 춤추는 법 배우기, 정원 가꾸기, 지역 박물관이나 유적지 탐험 등 신체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각의 유형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간의 처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처방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연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의료 전문가, 연결 담당자, 지역 사회 조직 간의 관계 구축을 우선시하여 이들이 서로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단계는 주민, 지역사회 단체, 보건 시스템의 핵심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에 집중하여야 한다.

3단계는 의료 전문가들의 협의로 공식적인 업무방식을 개발하고 공동 설계한 의뢰 경로, 정보 공유 및 피드백 루프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의료진과 지역 사회 단체를 연결한다.

4단계는 현재 NHS의 사회적 처방 모델이 의뢰 과정의 지역 사회적 측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자산과 지역사회 개발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영국의 사회적 처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심리사회적, 신체적 효과성 증대, 보건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처방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인적인 접근과 개입 강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링크워커의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적인 파트너십 강화, 지역자원 접근성 강화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 https://socialprescribingacademy.org.uk/what-is-social-prescribing/advice-and-information/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현승(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장)

고령화의 가속화와 중증 신체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에 달하며,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6.7%로 5년 전(35.5%) 대비 증가하였다(통계청, 2025).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보조기기 지원체계의 확대와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올바른 자세유지를 어려워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Postural Support Device)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체 변형을 예방하고 기능적 활동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최근 조사[1]에 따르면, 지체·뇌병변장애인 응답자의 82.9%가 자세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차 질환 유병률은 64.2%에 달했다. 자세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활치료비는 월평균 79만 원, 현재까지의 누적 수술비는 평균 855.2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세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존도가 높고, 생활만족도는 2.53점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세유지의 어려움이 신체 변형과 기능 저하뿐 아니라 사회활동 제약, 돌봄 부담 증가, 의료비 상승 등 다차원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유지보조기구의 인식률(78.9%)과 필요도(77.9%)에 비해 실제 사용률은 67.9%에 불과하다. 미사용 이유로는 높은 가격(47.4%), 맞춤형 제품 부족(16.1%), 정보 부족(14.6%)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기성품 중심의 시장공급 구조와 체험·상담 기회 부족도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층은 교체 주기가 짧고, 본인부담금이 207만 원~252.3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150만 원 미만)에 비해 매우 높아 건강보험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민간제작·판매업체 중심의 자세유지보조기구 시장은 기성품 위주, 고가,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업체와의 물리적 거리 또한 멀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다. 실제로 거주지에서 제작판매업체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33.1%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81%가 공공 차원의 자세유지보조기구전문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성장기 장애아동과 뇌병변장애군에서 그 수요가 두드러졌다. 주요 필요 이유로는 '정보 제공 및 체험 기회 확대', '맞춤형 제작 지원', '수리·교체 서비스', '전문 인력 상담' 등이 꼽혔다. 이는 단순한 보급을 넘어 상담-평가-체험-피팅-수리-연구개발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기술의 발전은 보조기기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3D 스캐닝과 프린팅, 인체공학적 설계, 인공지능(AI) 기반 자세 분석 기술, IoT 센서 등을 활용하면, 이용자 개개인의 신체 특성과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세유지보조기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융합은 기존의 획일적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넘어, 개인 맞춤형 스마트 보조기기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은 AI 분석, 3D 스캔 설계, 압력 맵핑(Pressure Mapping)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의학·작업치료·보조공학 등 다학제적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 평가-시뮬레이션-피팅(Fitting) 절차를 거쳐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제작과 자세유지 보정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세유지보조기구 지원제도는 일부 품목(예: 휠체어 이너)에 국한된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맞춤형 설계·피팅·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또한 전문 인력과 장비 인프라의 부족, 연구개발의 미흡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 내 자세유지보조기구 품목의 확대 및 내구연한(현행 3년)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자세유지보조기구 전문센터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이 센터는 자세유지보조기구의 평가-제작-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기 개입을 통한 신체 변형 예방과 의료비 절감, 일상생활 의존도 감소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3D 스캔, AI 자세 분석, 인체공학적 설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제작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단순 보급형 지원체계를 넘어 스마트 재활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다.

❶ 김현승·이진현·장선아(2025),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의미

안기덕(서울시복지재단 연구2팀 연구위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동(洞) 중심 실천[1]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시가 운영 지원을 위해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89개 사회복지관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왜 동(洞)을 중심으로 실천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에게 동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 관계망 형성에 용이하다. 둘째, 행정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단위이다. 주민들은 동 단위로 지역사회 문제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세밀한 동 단위에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는 점이다.[2]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동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통해, 변화의 의미를 듣는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주민이 그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단에서 수행 중인 2025년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주민이 얘기하는 변화도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부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동팀 체계 개편 등), 그리고 가능하면 거점공간이 있는 복지관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먼저 동팀 체계 개편에 따른 의견을 물어 보았다. '우리 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한다. 이전과 비교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 거점공간 운영에 따른 의견이다. 거점공간이 작아 처음에는 주민들의 인식이 낮았으나 차츰 주민들이 거점공간에 오면서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거점공간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사랑방 느낌의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거점공간은 주민 모임, 각종 프로그램 운영, 회의 등 공식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티타임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주말이나 복지관에 행사가 있을 때 문을 닫으면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셋째, 주민의 재능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개설하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단위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모임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앞으로도 동네에 조금 더 다양한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뷰 대상 중에, 돌봄 당사자도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꾸준히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후 주민 모임에 나가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서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 분은 중증 우울증과 신체 질환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꾸준히 찾아와 모임에 함께 하자고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모임 내 주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복지관을 이용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고립되어 있고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웃 주민들도 알아가게 되고, 친근함을 느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주민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복지관은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복지관은 행복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다. 복지관은 건강이다. 복지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다. 복지관은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곳이다." 요컨대 복지관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체감할 수 있는 언급이다.

그렇다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의 전환이 이분들이 이야기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과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결국 사회복지 현장의 숙명이다. 따라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그 자체가 '해답'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❶ 동 중심실천의 핵심 요소는 동중심의 조직개편, 직원의 통합적 역량강화(사회복지관 3대 기능의 통합실천 수행), 동별 거점 공간 마련 등이다.

❷ '동 중심실천 사회복지관 사례 연구(면목종합사회복지관 외, 2021)'의 내용을 기초로 보완 작성하였다.

Citizen Social Science(CSS) at Coventry, United Kingdom

Sinead Ouillon: Centre for Trust, Peace and Social Relations, S. Ouillon@coventry.ac.uk
Andree Woodcock, Centre of Arts, Memory and Communities, A.Woodcock@coventry.ac.uk

Coventry City/Fab(rication) lab in Coventry (UK) was established as an accredited Living Lab in 2011 originally to support development in sustainable transport and the built environment. Under its remit to support capacity building within the city and support local residents, SMEs using external funding of over £600k per annum. Fablab has actively engaged over 14,000 Coventry residents, students, entrepreneurs, run over 900 workshops, and helped 485 residents (mostly from excluded and deprived communities) gain 485 new qualifications. The Fablab provides a community space with both traditional and digital technology where issue of local interest can be freely and openly discussed.

영국 코번트리의 코번트리 시티/팹랩(Fablab)은 지속가능한 교통 및 건축 환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리빙랩(Living Lab, 사용자가 참여하여 실험과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옮긴이)으로 2011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연간 60만 파운드 이상의 외부 자금을 조달해 도시 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팹랩은 1만 4,000명이 넘는 코번트리 주민, 학생, 기업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900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했고, 485명의 주민(대부분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 출신)이 485개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팹랩은 또 지역 사회의 관심사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통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모두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Upskilling enables local citizens and migrants to the city to learn new practical skills, helping them to regain their confidence, integrate into the city and start their businesses. One such initiative has been the citizen social science programme. Originally launched in 2019 as part of the Migration Friendly Cities project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s Urban Innovation Actions), Coventry's CSS model empowers residents to become researchers in their own communities. Each year, since 2019, participants have co-designed and delivered small-scale studies exploring lived experience, wellbeing, and local systems, on topics from housing to mental health, food security and neighbourhood safety. Fablab Coventry was a MacJannet Prize for Global Citizenship Semi-Finalist.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Talloires Secretariat commented 'We received nomination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Citizen Social Science Programme stood out among them as an impressive and important effort.'

이러한 기술 지도를 통해 지역 시민과 도시 이주민들이 새로운 실무 기술을 배워서 자신감을 되찾고 도시에 적응하며 자신의 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시민사회과학(Citizen Social Science: CSS)이다. 2019년 유럽 위원회의 도시 혁신 활동(Urban Innovation Actions)의 지원을 받아 이주 친화적 도시(Migration Friendly Citi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코번트리의 CSS 모델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참가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 문제에서 정신 건강, 식품 안전, 마을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삶의 경험, 웰빙, 지역 시스템을 탐구하는 소규모 연구를 공동 설계하고 진행해 왔다. 팹랩 코번트리는 마침내 세계 시민권 맥재닛상(MacJannet Prize for Global Citizenship)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탈루아르 사무국장은 "우리는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노력으로 크게 인정받은 것이 바로 시민사회과학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코번트리의 시민사회과학

시니드 우이용, Sinead Ouillon: Centre for Trust, Peace and Social Relations, S.Ouillon@coventry.ac.uk
엔드리 우드콕, Andree Woodcock, Centre of Arts, Memory and Communities, A.Woodcock@coventry.ac.uk

The social science programme has featured prominently in 3 European projects looking at inclusive transport in the city and gender barriers i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example, the course has delivered in 10 countries as part of a large-scale EU project(https://transportgenderobservatory.eu/resource/an-introduction-to-citizen-social-science-for-trainers-and-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gender transport poverty. In the current Gender Innovation in Living Labs(GILL), CSSs are introduced to more gender sensitive research methods and encouraged to focus on gender-related issues in their community. GILL activities run in conjunction with Health Determinants Research Collaboration(HDRC) where Citizen Social Science(CSS)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me is a key strand of the work in Coventry reflecting a growing commitment to inclusive, community driven research that builds local capacity, while enhancing the city's understanding of the wide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xample of projects completed in 2024 and 2025 explore a key local issue related to health, wellbeing, and social inclusion. These studies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 Experience of newly arrived migrants in accessing health services in Coventry.
- Experience of people over 50 accessing creative activities to support good mental health.
- Experiences of baby wearing amongst new mothers.
- Barriers and enablers of access to green spaces.

우리의 사회과학 프로그램은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교통 시스템과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성별 장벽을 살펴보는 3개 유럽 프로젝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 과정은 성차별에 따른 교통 불이익(gender transport poverty)을 이해하기 위한 대규모 EU 프로젝트(https://transportgenderobservatory.eu/resource/an-introduction-to-citizen-social-science-for-trainers-and-participants/)의 일환으로 10개국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빙랩의 젠더 혁신(Gender Innovation in Living Labs: GILL)을 통해, CSS는 젠더 친화적인 연구 방법을 소개받고 지역 사회의 젠더 관련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GILL 활동은 건강 결정 요인 연구 협력(HDRC)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CSS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은 코번트리 사업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중심의 포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도시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과 2025년에 완료된 프로젝트 사례에서 우리는 건강, 웰빙,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주요 지역 문제를 탐구했는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귀중한 통찰을 주었다:

- 코번트리에 새로 이주해 온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 경험
- 50세 이상 장년 인구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창의적 활동 경험
- 초보 엄마들의 아기띠 사용 경험
- 녹지 공간 접근성 저해 요인과 접근 용이 요인

CSS involves peer led research, designed and conducted by community members with lived experience of the issues being explored. It draws on approaches including community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nd peer research and helps generate insight that is often missing and/or is difficult to attain from conventional academic or policy led studies alone. CSS is needed because:

- We live in an imperfect and complex society, and we don't know enough.
- Academic or expert research alone isn't sufficient to capture local nuance.
- Those closest to the issues are best placed to investigate them.
- More diverse research leads to more inclusive solutions.
- Involving people in research is a pathway to civic action and system change.

Citizen Social Scientists can help change how research is conducted (in Coventry) and how its results are used. Their work represents a rich, locally grounded evidence base that can inform more equitable, trusted, and culturally relevant public services and policies.

Each cohort receives practical training in peer research, developing key competencies:

Learning Outcome	Assessment Criteria
Understand peer research	Explai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Know how to carry out research	Understand methods; recognise potential ethical issues.
Plan and design a research project	Select appropriate tools and structure an investigation.
Conduct a peer research project	Carry out fieldwork, interviews, surveys or observation.
Evaluate and reflect on their own research	Assess impact, recognise challenges, and identify improvements.
Share findings with stakeholders	Communicate results and co-author a public report.

CSS는 탐구 대상 문제에 대해 실제 경험을 가진 지역 사회 구성원이 설계하는 동료 주민 주도 연구를 수행한다. CSS는 지역사회 참여 행동 연구 및 동료 연구를 포함한 접근 방식을 활용해 기존의 학술 또는 정책 주도 연구만으로는 종종 놓치거나 얻기 어려운 통찰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CSS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불완전하고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 학술 또는 전문가 연구만으로는 지역의 미묘한 정서를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수록 더 포용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 지역 현안 연구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시민 행동과 시스템 변화로 이어진다.

시민사회과학자들의 참여는 코번트리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과 그 결과가 활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연구는 보다 풍부하고 지역 기반의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공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 사회는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으며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학습 결과	평가 기준
동료 연구 이해	동료 연구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수행 방법의 이해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잠재적 윤리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연구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조사를 구조화할 수 있다.
동료 연구 프로젝트 수행	현장 조사, 인터뷰, 설문 조사 또는 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 및 자체 연구에 반영	영향력 평가, 과제 인식 및 개선 사항 파악이 가능하다.
이해 관계자와 연구 결과 공유	결과를 토의하고 공공 보고서를 공동 작성할 수 있다.

How is it delivered

The course is delivered in person and online or hybrid, over four, four-hour sessions. Once this part of the course has been completed, the CSS will have identified their research question have chosen an appropriate methodology and conduct a small field study to gather data. In this they are supported by professional researchers who act as mentors, facilitators and who help organise venues, materials etc. Once the CSS have completed their study they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results to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interested residents and local authority representatives.

진행 방식

이 과정은 4시간 동안 4개 세션에 걸쳐 대면 및 온라인 또는 혼합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CSS는 연구 질문을 결정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한 후 소규모 현장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멘토 및 진행자로서 지원하고, 장소, 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CSS가 연구를 완료하면 관심 있는 주민 및 지방 당국 담당자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For further detail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authors and download the co-authored report which offers a unique perspective on community needs that complements official data, formal consultations, and expert analysis.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문의하거나, 지역 사회 요구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공동 저술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식 데이터, 공식 협의 및 전문가 분석 등이 보완·수록되어 있다.

Note from the Authors

Living Lab and Fab(rication) Lab

The **Living Lab in Coventry** was established first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inclusive innovation environment. Its purpose was to bring together diverse stakeholders, citizens, community group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collaboratively explore, co-design, and test social innovations in real-life contexts.

The **FabLab Coventry** emerged later as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this Living Lab approach. While the Living Lab provided the conceptual and participatory framework, the FabLab offered a dedicated maker space equipped with tools, machinery, and technical expertise. This allowed participants to move beyond ideation and co-design into practical prototyping and experimentation, thereby strengthening the Living Lab's capacity to support social innovation.

Citizen Science vs. Citizen Social Science

Citizen Social Science refers to participatory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in which citizens work with researchers to generate and interpret knowledge about social issues (Heiss & Matthes, 2017). While Citizen Science typically involves public participation in natural science or environmental research (Haklay, 2013), Citizen Social Science adapts these principles to social inquiry, emphasising co-production, reflexivity, and community relevance (Albert et al., 2021). It can therefore, be understood both as a distinct participatory framework (Kythreotis, 2019), as well as a social science, specific extension of the broader Citizen Science tradition (Bonney et al., 2016). In Coventry, Citizen Social Science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Living Lab and FabLab frameworks, supporting citizen-led insight, experimentation, and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참고자료

1. Bogue, K, Wilson, S., Rees, J., Takhar, O., Ouillon, S. (2021) 정신 건강 지역 사회 경청 프로젝트: 웨스트 미들랜즈 통합 당국 보고서(*Mental Health Community Listening Project: Report for the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p. 72(https://www.wmca.org.uk/media/urkjsm0y/mental-health-doc-79.pdf)
2. Albert, A., Balázs, B., Butkeviciene, E., Mayer, K., Perelló, J., & Vohland, K. (2021). Citizen Social Science: New and established approaches to participation in social research. *Citize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6*(1), 1–12.
3. Bonney, R., Phillips, T. B., Ballard, H. L., & Enck, J. (2016). Can citizen science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5*(1), 2–16.
4. Haklay, M. (2013). Citizen science and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Overview and typology. In D. Z. Sui, S. Elwood, & M. F. Goodchild (Eds.), *Crowdsourcing geographic knowledge* (pp. 105–122). Springer.
5. Heiss, R., & Matthes, J. (2017). Citizen science in the social sciences: A call for more evidence. *GAIA, 26*(1), 22–26
6. Kythreotis, A. P., Mantyka-Pringle, C., Mercer, T.G.,Whitmarsh, L. E., Corner, A., Paavola, J., Chambers, C., Miller, B. A., & Castree, N. (2019/02/05/). Citizen Social Science for More Integrative and Effective Climate Action: A Science-Policy Perspective.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https://doi.org/10.3389/fenvs.2019.0001

영국 성중립 화장실 정책변화와 현황

윤새별(영국 에딘버러 대학 사회·정치학 박사과정)

스코틀랜드 정부는 9월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초등 및 중등학교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ance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을 재발행한 것은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에서 "2010년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여성의 법적 정의는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같은 달 내려진 또 다른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스코틀랜드의 학교들은 학생들을 위해 성별이 구분된, 단일 성별 화장실(single-sex toilets)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는 자녀들의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facilities, 남성과 여성이 대기 공간 및 세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만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더스(Borders)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지난 6월 BBC는 보도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스코틀랜드 지역의 최소 6개의 학교에서 남녀가 구분된 단일 성별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이 노출될 우려를 제기하며 휴식 시간 외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시설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영국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영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브라이튼(Brighton)에서는 2013년에 성전환(transsexual) 주민들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 후 남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성중립 화장실로 교체해 나갈 것과 로팅딘(Rottingdean) 해변에 첫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남녀 분리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느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2016년 런던 동부 레이턴스톤(Leytonstone)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후 학부모 625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년간 논란이 거듭된 끝에 영국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공중 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여론을 수렴(Toilet provision for men and women: call for evidence)하였다. 그 결과 1만 7천 건이 넘는 응답이 접수되었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성별 구분 없는(non-gendered) 형태의 화장실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1] 동시에 성중립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사항도 다수 접수되었다. 특히 공공 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로 전환되면서 여성과 노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여성들은 임신, 갱년기, 월경 등 상황에 따라 화장실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데, 남녀 공용 시설이 건강 상태를 노출하는 등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국 정부는 건축 규정 관련한 기술적 자문 및 공청회 끝에 2024년 5월, 신축 비거주 건물(new non-domestic buildings)에 남녀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성별(single-sex)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여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과 주택부 장관(Housing Minister)은 이 같은 규정이 안전, 프라이버시, 존엄성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다만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유니버설 화장실(universal toilet, 1인이 사용하는 밀폐형 구조의 화장실로 내부에 세면대가 갖춰진 형태)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개별 이용형 유니버설 화장실(self-contained universal toilet)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상반된 의견이 부딪혀 온 만큼 자율 응답 방식의 여론 수렴, 기술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정책 문제를 풀어가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후속 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이 유효했는지, 어떤 사회적 영향을 야기했는지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5/sep/29/scottish-government-rules-schools-must-provide-single-sex-toilets-for-children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q7ldw3p0o
https://www.europeancleaningjournal.com/magazine/articles/latest-news/public-toilets-in-brighton-uk-to-become-gender-neutral
https://www.gov.uk/government/calls-for-evidence/toilet-provision-for-men-and-women-call-for-evidence/outcome/toilet-provision-for-men-and-women-call-for-evidence-analysis-of-responses-receiv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lay-new-law-to-halt-the-march-of-gender-neutral-toilets-in-buildings

❶ 해당 응답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자유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에 주의해야 하며 제시된 수치를 '(성별 구분 없는 혹은 있는) 한 가지 형태의 화장실만을 찬성하는 국민의 숫자'로 해석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복지서비스 전환 모델

Universal Support

정우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주임)

영국은 복지제도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복지, 고용,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이 각각의 다른 기관을 통해 운영되면서 대상자들은 여러 부처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23년 복합적인 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유니버설 서포트(Universal Support)' 프로그램을 발표했다.[1]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 대신 국가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현실화하는 제도이다.

유니버설 서포트는 건강 문제나 장애, 장기 실직 등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상담과 직업훈련, 건강관리, 생활안정 등 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연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2]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현금성 급여보다 효율적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복지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많은 복지체계가 현금 급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대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까지 온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유니버설 서포트처럼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면 대상자가 스스로 이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게 되어 자원이 보다 정확히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다. 서비스 중심 접근방식은 정해진 지원이 직접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자립 여정이 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 서비스로의 전환은 단지 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지원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니버설 서포트는 중앙정부인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총괄하며, 지방정부와 의료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이 협력해 운영된다.[3] 각 지역의 잡센터(Jobcentre)가 참여 대상을 발굴하고 의료 및 복지기관은 건강,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영국의 지방도시 우스터셔(Worcestershire)는 2024년 7월 의회 보고서[3]를 통해 유니버설 서포트 지역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우스터셔 주는 지역 내 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 중이며 중앙정부에 지역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025년 기준 유니버설 서포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는 아니지만 일부 지방정부 중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5년 10월 영국 고용연금부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4]에선 앞으로 일차의료기관(General Practitioner)에 고용 상담사를 배치해 병원 내에서도 일자리 상담과 복지 연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2025년 복지와 고용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유니버설 서포트는 복지의 중심을 현금 지원에서 서비스 접근권 보장으로 옮기는 복지체계 전환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효율성보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역시 서비스가 각각 나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 구성에서 급여 비중이 높다는 점이 복지체계 개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5] 따라서 한국은 현금성 복지에서 서비스 기반 복지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니버설 서포트는 복지의 본질적 목표를 다시 묻는 모델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1) HM Treasury. (2023, March 15). "Spring Budget 2023."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3
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2023, September 13). 25,000 people to be helped into work as government ramps up roll-out of flagship Universal Support scheme.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25-000-people-to-be-helped-into-work-as-government-ramps-up-roll-out-of-flagship-universal-support-scheme
3) Worcestershire County Council (2024.07). "Implementing the DWP Universal Support Programme." Cabinet Report. Worcestershire.gov.uk. https://worcestershire.moderngov.co.uk/documents/s54323/4%2BUniversal%2BSupport%2B-%2BJuly%2B2024%2BV3%2B006%2B002.pdf
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2025, October 9). Job advisers to be embedded in GP surgeries as tens of thousands more sick and disabled people offered help into work.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b-advisers-to-be-embedded-in-gp-surgeries-as-tens-of-thousands-more-sick-and-disabled-people-offered-help-into-work
5) 신정우(2025), 「OECD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4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정부의 청년돌봄자 지원정책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의 돌봄정책은 주로 장애인, 노인이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정책도 예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돌봄의 주체는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같은 전문인력이 맡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다른 방법의 하나로 가족돌봄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가족돌봄은 제도적 지원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가족돌봄자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부족한 돌봄주체를 보완하고 가족돌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측근들의 돌봄을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은 복지재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뿐 아니라 가족연대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프랑스의 가족돌봄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50%가 여성이며 주로 부부 중 한 명을 돌보는 비율이 57%, 세대별로는 노인돌봄이 57%로 가장 많다. 이중 청년층 돌봄자는 약 80만 명으로 평균 16-25세이다. 이들은 전적으로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직업활동 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3-2027년 돌봄자들을 위한 국가전략'을 세웠는데 이 전략에 청년돌봄자들의 지원도 강화하였다. 청년돌봄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은 직업활동을 하는 그룹과 학생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가족연대휴가(le congé solidarité familiale)'로 가족 중 중증질환자를 돌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최소 15일 전에 휴가 신청을 해야 하고 돌볼 사람의 의사 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한 번 재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일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돌봄휴가(le congé de proche aidant)'로 임금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가족돌봄자는 이 휴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직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되는 소득 손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족돌봄 일일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u proche aidant: AJPA)'이 있다. 이 수당은 2020-2022년 가족돌봄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이 세워졌을 때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일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로부터 가족돌봄 휴가 허가를 받은 공기업, 민간기업 임금근로자,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 자영업자, 급여를 받는 수련생이다. 단 고용센터에 실업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돌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보는 가족이 반드시 장기요양보험 대상 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액은 종일 돌봄일 경우 연간 최대 66일, 반일 돌봄일 경우 연간 최대 132일이다. 2025년부터는 돌봄자 한 명이 여러 명의 가족을 돌볼 경우에 한해 이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단 연간 264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가족돌봄 수당은 월 단위 지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계산된다. 수당액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50%이상, 최대 85%까지이다. 2025년 책정된 수당액은 하루 65.8유로, 반일 32.9유로이며 이 수입은 세금 신고 대상이다. 돌봄시간은 주당 최대 35시간이다. 이 수당은 가족수당기금(caf.fr)이나 농업상호기금(MSA)을 통해 지급된다. 이 수당 외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학생일 경우에는 장학금지원이 있으며 '2023-2027 가족돌봄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이 세워지면서 장학금 책정 기준에 4점을 더 추가하여 좀 더 인상되었다. 또한 학업시간과 시험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들이 돌봄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신과,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등도 주선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돌봄자와의 관계, 돌봄기간, 돌봄형태등을 기재하는 가족돌봄 증명서(Attestation sur l'honneur)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년 돌봄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일 경우 학업지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젊은이의 경우 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제한적인 업무로 장기적으로 직업활동과 경력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자료

https://handicap.gouv.fr/sites/handicap/files/2023-10/Dossier-de-presse-strategie-des-aidants-2023-2027.pdf
https://secu-jeunes.fr/mes-droits-et-demarches-avec-la-securite-sociale/la-secu-dans-les-situations-difficiles/je-suis-jeune-aidant-comment-la-securite-sociale-maccompagne
https://www.parlons-fin-de-vie.fr/je-suis-un-proche/les-conges-et-les-aides-financieres/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solutions-pour-les-aidants/soutien-financier/l-allocation-journaliere-du-proche-aidant-qu-est-ce-que-c-est
https://www.essentiel-autonomie.com/etudes-infographies/jeunes-aidants-qui-sont-ils-comment-aider
https://solidarites.gouv.fr/agir-pour-les-aidants
https://jeunes-aidants.com/#:~:text=Les%20jeunes%20aidants%20sont%20des,de%20soutien%20ou%20de%20supervision

2025년 연방 선거를 통해 드러난 호주 복지의 민낯과 성찰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는 종종 사회 전체의 민낯을 낱낱이 들춰내는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한다. 호주의 2025년 연방 총선이 더욱 그렇다. 선거 기간 중 유권자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제들은 주거와 생계비 문제 및 의료 접근성이라는 당면 문제에서 벗어나 세대 간 자산 불평등과 공공서비스의 병목 현상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최근 호주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임금 경제'에서 '자산 경제'로의 이동 속에서, 주거 확보는 계층 이동의 관문으로 대두되고, 돌봄, 성 불평등 및 환경 문제 등 기존 복지 체계의 취약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이러한 복잡해진 사회복지 이슈들은 더 이상 개별적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5월 3일 연방 총선은 이 균열과 불균형을 무자비하게 드러내는 성찰의 과정이었다. 결국,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직면한 총체적 과제는 진보 성향인 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의 재집권으로 귀결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투표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쟁점이 되었다.

우선, 호주의 주거 문제는 단편적인 기술적 조정을 넘어 세대 간 지속가능성의 재해석과 이에 맞는 세대 간 계약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멈출 줄 모르는 주택 및 임대가격 상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가족 형성을 지연시키며, 출산, 노동 공급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초점은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공공 임대와 공유 지분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토지-금융-조세 간의 유연한 조합, 그리고 세대 간 이전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 및 식료비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압박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부채질하며, 기초 의료의 병목 현상과 지역 간 격차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고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주도형의 일차 의료와 돌봄의 연계, 이동 원격 의료의 본격적 도입, 그리고 문화적 적합성 향상을 위한 성과책임제의 재설계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가장애 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과 노인 돌봄(Aged Care) 정책은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공공 서비스로 늘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단순한 비용 억제의 차원을 넘어 서비스 지원의 적정성 재검토, 공급망의 질적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가족 파트너십의 강화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전환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재가 돌봄(Support at Home, Aged Care Act 2024)은 기존의 단절된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돌봄 수요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준비와 인력의 전환, 그리고 가족 및 지역 간 연계의 공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연방 재가 돌봄 프로그램(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의 본격적인 편입이 2027년 7월 이후로 단계화된 만큼, 전환기의 혼선을 줄이는 전략적인 이행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25년 선거는 사회 복지 의제를 돌봄 경제, 성평등 그리고 환경적 복지의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돌봄 경제와 관련해서 노동당 정부는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유아 교육 기금(Building Early Education Fund)을 설치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더해 하루 10-20달러 정액제 보육 모델 설계를 통해 보편적 돌봄 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했다. 호주 인구의 24%가 '보육 사막 지역(childcare desert)'에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돌봄 인프라의 구축이 여성의 노동 참여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부는 또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상당한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가정 폭력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한편, 기후 변화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최우선 투표 이슈였으며, 보수 진영 연합의 원전 건설(2035년 첫 가동 공약)과 노동당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2030년까지 82%)가 날 세워 대립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같은 거시 정책은 단순히 환경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생계비 물가와 세대 간 형평의 문제로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충,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25년 연방 선거가 남긴 뼈저린 성찰은 복지 국가의 양적 확장보다 세대 간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재설계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 생계비, 의료, 돌봄, 환경 복지 등은 각기 다른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복지 생태계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작동한다. 국가 부채가 1조 달러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개별 프로그램의 확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고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고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세대 간 연대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복귀할 때, 이번 선거가 드러낸 복지 체제의 민낯과 균열은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의 전환을 이끄는 촉매가 될 것이다. 이는 단지 2025년 호주만의 성찰과 과제가 아닐 것이다.

복지이슈 TODAY

WELFARE
ISSUE
TODAY

https://www.welfare.seoul.kr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T.02)6353-0200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